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군산조선소 부활 ‘신호탄’

전북, K-스마트 조선으로 산업 대전환

김 지사, 스마트 조선산업 핵심기지 육성 청사진 제시

AI·친환경 기술 결합, 산업 외연 확장 등 네가지 전략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군산 조선소 재기동을 넘어 전북을 대한민국 스마트 조선산업의 핵심 기지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단순한 산업 회복이 아닌 인공지능(AI)과 친환경 기술을 결합한 미래형 조선 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것이다

김 지사는 25일 전북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기반을 확보했다”며 “이제는 과거의 회복을 넘어 대한민국의 조선산업의 미래를 이끄는 새로운 항해를 시작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상기된 표정으로 “군산조선소는 한때 대한민국 조선업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지만, 지난 9년간 긴 침체의 시간을 겪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지역의 기업과 노동자들은 조선업 생태계를 지켜왔고 이제 다시 도약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번 구상이 단순한 재가동만이 아닌 ‘산업 구조의 전환’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과거 기능을 복원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며 “군산조선소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친환경 조선소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세계 조선 산업은 지금 거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 AI와 디지털 기술이 생산 공정을 혁신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탄소 중립을 목표로 친환경 선박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러한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전북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표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제시한 전략은 크게 네 가지로 압축된다.

첫 번째는 AI 기반 디지털 조선소 구축이다. 전통적인 수작업 중심의 조선 공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하고, 인공지능이 생산 과정을 분석·최적화하는 스마트 생산 체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약 1조원 규모의 피지컬 AI 실증 기반을 조성하고, 해양 모빌리티 AI 혁신 허브 구축 사업을 병행 추진한다.

특히 2028년까지 제조 AI 오픈랩과 가상공장 플랫폼이 구축되면, 기업들은 실제 건조 이전에 가상공간에서 선박 제작 과정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생산 오류를 줄이고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는 친환경 스마트 선박 시장 선점이다. 전북도는 수소와 암모니아 등 차세대 연료를 활용한 추진 시스템 개발에 집중하고, 군산조선소를 중심으로 완주 수소 클러스터, 새만금 수소 생산기지를 연계해 친환경 선박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4억원 규모의 해양 무인 시스템 실증 테스트베드를 조성해 자율운항 스마트 기관실 등 미래 선박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 기자재 업체들이 글로벌 친환경 선박 시장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세 번째 전략은 조선 산업의 외연을 MRO(유지·보수·정비) 분야로 확장하는 것이다. 김 지사는 “앞으로 조선 산업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것을 넘어 유지·관리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북도는 군산을 거점으로 해군과 해경이 사용하는 특수목적선 MRO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해군과 해경의 수요 확보 문제도 점차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5일,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조선산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네 번째는 인재 양성이다. 김 지사는 “조선업은 결국 사람이 하는 산업”이라며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 2면에 계속 /01만호 기자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 사업 추진 정상화 ‘탄력’

법원, 환경단체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국토부, 사업 추진 동력 확보… 본안 항소심 대응

도내 곳곳 환영 표명… “지역발전 의지 존중 결과”

서울고등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에 제동을 걸려던 환경단체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1심 판결 이후 다소 주춤했던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다시 정상화·계도에 오를 전망이다.

25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22행정부는 이날 오전 9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과 관련해 신청인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차 신청은 기각, 2차 신청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판결 확정 전까지 그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제도이다. 이번 소송에서 환경단체 등 신청인 측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본계획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1차 신청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집행정지의 실제적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2차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송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5년 9월 11일, 1심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를 판결을 내리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불복한 국토교통부가 즉각 항소했고, 원고 측은 항소심 판결 전까지 사업 추진을 막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국토교통부는 사업 추진의 동력을 다시 확보하게 되

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신청인 측의 즉시하고 여부를 지켜보면서, 본안 항소심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보인다.

민약 신청인 측이 1주일 이내에 즉시하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번 집행정지 결정은 그대로 확정된다.

한편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도내 곳곳에서는 환영을 표명했다.

먼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균형성장 철학을 실현할 핵심 인프라인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며 “180만 전북도민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전북 도민들에게 새만금 국제공항은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전북을 세계와 연결하는 관문이자 수도권에 집중된 하늘길을 나누는 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라며 사업의 상징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도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사업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재확인한 사법적 판단”이라며 “전북 도민의 오랜 염원과 지역 발전 의지를 존중한 결과”라고 밝혔다.

우범기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예비 후보 역시, 입장문을 통해 “자원이 중단 위기를 넘겼다”며 “전주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으로 최악의 사업 중단 위기를 넘긴 만큼, 지자체가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며 “지역사회의 역량을 결집해 흔들림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01만호 기자

전북도, 국가예산 11조원 시대 열기 위한 선제 공세 나서

2027년 국비 확보 신규사업 발굴 3차 보고회

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도는 작년 9월부터 전북연구원 및 14개 시군과 함께 7개월 동안 총 507건, 6,927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발굴했다.

분야별로는 △전북 대도약·대전환

을 위한 산업·경제분야 △농생명 산업수도 전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농생명분야 △도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문화·체육·관광 분야 △전북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새만금 분야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한 SOC분야 △안전하고 든든한 전북실현을 위한 환

경·안전·복지 분야 등에 대한 발굴이 이뤄졌다.

도는 향후 타운홀 미팅 후속 사업과 현대차 투자 연계 사업 등을 보완해 확보 규모를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앙부처 예산안 편성의 골든타임인 5월말까지 우리 도 사업의 국경과제 연계 논리를 더욱 정교하게 다

들어 부처안 반영률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특히, 부처가 예산 한도 부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경우에 대비해, 전북도의 사업이 국가 전체의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필수사업’임을 입증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부처 예산안 편성의 골든타임인 5월말까지 우리 도 사업의 국경과제 연계 논리를 더욱 정교하게 다

계를 가동하며 부처예산 반영을 위한 활동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기회에 산체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적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대체논리’를 제공하는 밀착 대응을 나선다.

이 밖에도, 원내대표와 장관, 최고위원을 배출하며 강화된 지역정치권의 위상을 적극 활용하여 정부안 편성 단계에서부터 전북자치도의 핵심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실무 작업을 병행할 계획이다. /01만호 기자

시민이 주인!
더 듣고 더 뛰는 실천의회
익산시의회

익산시의회
IKSAN CITY COUNCIL